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673호
2018. 8. 27

정책동향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 ▮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투자 확대' 내용과 과제
- ▮ 소득 불평등과 인프라 투자

시장동향

- ▮ 2018년 상반기 수주,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산업정보

- ▮ 한·미·일 건설업종 분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 한여름 폭염 속에 겨울로 가는 건설 투자

국제 컨퍼런스 개최

- ※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2018년 9월 11일 14:00, 국회 의원회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 지역 인프라 투자 지연은 지역경제 및 지역 일자리에 악영향 미쳐 -

■ 정부의 SOC 투자와 지역경제의 관계, 투자 감소하면 경쟁력 줄고 삶의 질 떨어져¹⁾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
 - 2015년 26조 1,000억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축소 편성되어 2018년에는 18조 9,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2017년에 비해서도 14.2%나 축소된 것임.
 - 특히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등 교통 분야의 SOC 감소세가 뚜렷함. 2017년 대비 2018년 도로 부문은 19.9%, 철도 및 도시철도 부문은 27.3%가 감소함.
- SOC 예산의 축소 편성 지속으로 건설 투자에서 토목 투자가 9년 연속 감소함.
 - 2009년 이후 토목 투자가 꾸준히 줄고 있음. 이에 따라 토목시장 비중은 2009년 45%에서 2017년 26.1%까지 축소됨.
 - 이는 정부가 완공 위주의 예산 집행으로 기존 사업들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신규 토목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인 것에 기인함.
- 따라서 건설 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의 감소세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토목 투자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15년 4/4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함.
- SOC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는 지역경제 및 지역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인프라는 20위, 물류 경쟁력은 25위에 그치고 있음.
 - 평균 통근 시간은 2015년 기준 62분으로 OECD 평균인 29분에 비해 30분 이상 더 소요되고 있으며, 1년 동안의 교통혼잡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13%인 33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음.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지역 인프라,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불균형도 심각

- 대부분 지역이 인프라의 양적, 질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 정책 부재로 인프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1) 본고는 2018년 8월 21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의 제1 주제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100대 SOC 제안"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먼저, 지역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발전 전략의 실현성이 현저히 낮음.
 -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의 기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더 큰 문제는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의 부족임.
 - 지역민들은 생활권 도로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와 대중교통 시설 투자의 지연에 따라 교통 불편을 겪고 있음. 방재시설 및 환경 관련 인프라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편의시설의 부족도 심각함.
 - 아울러 농·산·어촌 지역과 대부분 도시들의 구도심 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것도 문제임.
- 지역 인프라의 지역 내, 지역 간 공급의 불균형은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 발전 초기에 집중 설치된 인프라 시설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도 지역들이 직면한 인프라 현안임.

■ 인프라에 대한 사고 전환과 지자체 재정 상황을 감안한 투자 지원 필요

- 지역 인프라 투자 목표는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만 그 중요성을 한정하던 사고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등 지역민들의 변화된 인프라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선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지역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의 증대 및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물류단지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산업과 경제 분야 인프라 시설의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함. 풍부한 지역 관광 자원의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노력도 긴요함.
 - 지역의 핵심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현재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인프라 현안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 재원 지원은 필수적이며, 민간투자 활성화 및 지자체의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의 상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투자 확대’ 내용과 과제

- 생활 인프라 확대 위한 10대 과제 제시, 내년에 7조원 이상 투자 -

■ 내년에 지역과 밀착된 생활 인프라 분야에 7조원 이상 투자²⁾

- 지난 8월 8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정부(기획재정부)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에 대해 2019년 7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을 발표함.
 - 정부는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적 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 ‘문화·건강·관광 등 국민의 여가·건강 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의 활력 제고’, ‘생활 안전·환경의 질 제고’를 제시함.

■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 정부는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과제와 함께 각 과제별 2019년 도 투자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표 1> 참조).
 - 여가·건강 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대’,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 계획으로 국민체육센터(60개)·개방형 다목적 체육관(20개) 건립, 박물관 등에 VR·AR 체험존 설치(19개) 등을 제안함.
 - 지역 활력 분야의 과제로는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그리고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확산’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신규 100개소), 어촌뉴딜(신규 70개)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노후 산단 재생, 스마트 공장(2,100개) 및 스마트 영농(스마트팜 4개 등)의 확산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활 안전 및 환경 분야는 ‘복지시설 기능 보강’,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설치 및 보급 지원’ 과제를 제시함.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시설·저소득층 노후주택 등 안전 취약시설의 개선, 학교·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 등 안전 강화,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확충,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농가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 등을 제안함.

2) 본고는 2018년 8월 8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과제 및 주요 계획

구분	과제	방향 및 주요 내용
여가·건강 활동 지원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접근성이 높고 장애인도 편리한 체육시설 마련, 문화·복지를 위한 주민 복합공간 구축 · 국민체육센터(60개), 다목적 체육관(20개), 복합 커뮤니티센터(혁신도시 5개소) 신설
	지역 관광 인프라	· 지역 문화자원(전시시설 등) 보강·정비, 자연 관광자원(국립공원 등) 활성화 · 국립박물관 등 VR·AR체험관(19개) 설치·보강, 노후 전시관 개편 ·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6개), 안내판 정비(6만 개)
지역 활력	도시 재생	· 노후 주거지 내 기초생활 인프라(주차장·도서관 등) 설치, 쇠퇴 지역 문화창업시설 확대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 : 2018년 68개 지역→2019년 168개 지역(100개 지역 증가) · 도시재생 리츠 융자 조건 완화 및 자금 지원 확대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개발, LPG 배관망 등 낙후된 기반 시설 정비 · 2019년 70개소 선정·지원(국비: 지방3), 단기간 완료 가능한 SOC 선제적 지원(방파제, 선착장 정비), 군 단위 LPG 배관망 공급(7개군)
	스마트 영농	· 스마트 ICT 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효율성 향상, 청년층 인력 유입 유도 · 스마트팜 혁신 벨리(4개),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 조성
	노후 산업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노후화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량 및 근로환경 개선, 지역 중소기업 시설 고도화 지원 · 청년친화형 산단 확대(2018년 6개→2019년 13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스마트 공장 지원 대상(2,100개) 및 금액 확대
생활 안전 및 환경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소외계층 거주지·시설 보강을 통해 기본적 주거 생활권 및 삶의 질 제고 · 복지시설(장애인, 노숙인, 한부모) 등에 화재 예방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수리 등
	생활안전 인프라	· 주거·교통안전 등 국민들의 접근성·이용 빈도가 높은 생활 속의 안전 인프라 확대 · 지진·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설 강화 · 농촌 노후주택 등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주민보호구간(30개) 확대, 전통시장 노후전선(57곳) 개선, 횡단보도 조명 신설(257개) 및 보강(395개)
	미세먼지 대응	· 도시·근교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필터 효과, 친환경 차량 보급·확산 기반 마련 · 도시 바람길 숲 7개, 미세먼지 차단 숲 60ha 조성 · 전기차 충전기 1,070기(급속), 수소차 충전소 20개 조성
	신재생 에너지	· 소규모 농가·협동조합에 재생에너지 설치 자금 지원 ·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 투자와 함께 투자 분야의 확대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향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상위 공급 계획을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의 생활 인프라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생활 인프라로 분류해볼 수 있음.
 - 기초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노후화 및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생활 인프라 시설물을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주거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육·복지 분야, 안전 분야 등의 시설군으로 분류해봄으로써 전방위적 접근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임.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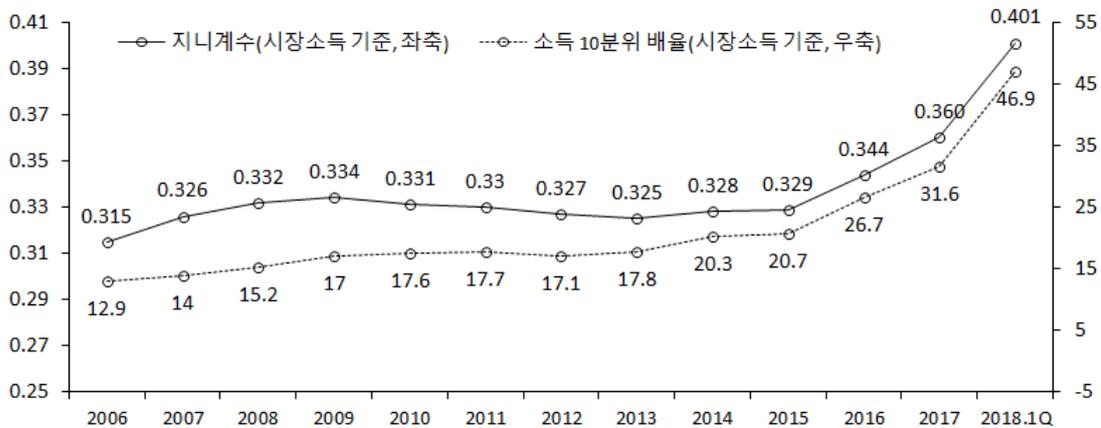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과 인프라 투자

-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

■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 최근 크게 악화

- 최근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 자료³⁾에 따르면 국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최근에 급격히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위 계층의 소득은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임.
 - 가령 위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1분기에 소득 하위 20% 가구의 총소득은 11.5%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반대로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지표 변화 추이



주 1) :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며, 소득 분배가 평등할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불평등할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짐.
 2) : 소득 10분위 배율은 (상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합계 / 하위 10% 소득 계층의 소득 합계)로 구해지며, 값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높아짐을 의미함.
 자료 : 강신욱,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2018.8)의 자료를 가공함.

■ 소득 불평등도 심화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

- 2016년 이후 소득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크게 악화된 데는 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최저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주된 이유로 지목됨.⁴⁾
-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생산성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3) 강신욱,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월간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2018. 8)
 4) 서울경제, 「최저임금 인상 후 양극화 더 심해졌다」, 2018. 8. 15.

로 하락해 왔고, 이 기간 중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어 온 측면도 존재함.

<표 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및 노동 소득 분배율 변화 추이

구분	1995년(A)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B)	차이(B-A)
경제성장률	9.6%	8.9%	3.9%	6.5%	2.8%	2.9%	-6.7%p
노동 소득 분배율	63.46%	60.04%	59.27%	53.97%	55.72%	56.24%	-7.22%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상영, 「소득불평등 지표 변동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월간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2018.8)의 자료 가공.

■ 해외에서는 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강조

- 해외 국가들에서도 소득 불평등도 심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도의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OECD(2014)는 지난 30년 간 OECD 국가들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현재 가장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⁵⁾
 - 그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 불평등도 개선과 더 나아가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⁶⁾
 - 반면, 정부 재정에 기반한 지나친 복지 지출 확대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도 확인됨.⁷⁾
 - 이에 OECD(2015)는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인프라 공급의 확대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함.⁸⁾

■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양적 경제 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수 생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분배적 효과도 함께 가짐. 따라서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작업과 더불어, 경제 성장 효과와 분배 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5) OECD, “Trend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163(2014) 참조.

6) World Bank, “Infrastructure, Growth, and Inequality : An Overview”(2014.9) 내용 참조.

7) OECD, “The Effect of the Size and the Mix of Public Spending on Growth and Inequality”,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1344(2016.11) 내용 참조.

8) OECD,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 Policy Tools to Achieve Balanced Growth in G20 Economics”, Framework Working Group Antalya, Turkey(2015.10) 내용 참조.

2018년 상반기 수주,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 공공 21.7%·민간 4.4% 감소, 주택·도로와 철도 수주 등 부진 -

■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 공공과 민간 모두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

-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2018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1~6월까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5.9%, -30.3%, 7.4%, -31.3%, 2.8%, -13.4%를 기록하면서 등락을 반복하였음.
 - 결국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71조 4,219억원을 기록함.
 - 다만,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금액 자체는 준수했던 것으로 분석됨.

■ 상반기 공공 수주, 모든 공종에서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

- 올 상반기 공공 수주는 모든 공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지난 2013년 이후 5년래 최저치인 17조 2,437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함.
 - 토목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줄어든 10조 8,312억원을 기록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5년래 최저치를 보임.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8.9% 감소한 2조 2,356억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6년래 최저치인 4조 1,768억원을 기록함.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4% 감소함.

<표 1> 2018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주택	비주택	
2017. 1~6월	78,678.6	22,022.1	13,819.0	8,203.0	3,146.2	5,056.8	56,656.8	9,471.5	47,185.2	28,591.5	18,593.7
2018. 1~6월	71,421.9	17,243.7	10,831.2	6,412.5	2,235.6	4,176.8	54,178.3	10,551.9	43,626.3	23,278.3	20,348.1
증감률	-9.2	-21.7	-21.6	-21.8	-28.9	-17.4	-4.4	11.4	-7.5	-18.6	9.4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부문, 주택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

- 2018년 상반기 민간 수주는 주택 수주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함.
 - 비록 전년 대비 감소하였어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54조 1,783억원을 기록해 금액상으로는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됨.
 - 토목 수주는 민간 기업의 기계설치와 발전소 수주가 양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10조 5,519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부진하고, 신규 주택 수주도 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함으로써 최근 4년래 최저치인 23조 2,783억원에 그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상업용 건물과 공장 및 창고 수주가 양호해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20조 3,481억원을 기록함.

■ 세부 공종별로 건축 중에서는 주택이, 토목에선 철도와 도로 수주가 부진

- 세부 공종별로 보면 건축 중 공장 및 창고와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음(<표 2> 참조).
 - 주택 수주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15.0% 감소함.
 - 사무실 및 점포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4%, 35.0% 감소했음.
 - 공장 및 창고와 기타 수주는 각각 25.3%, 17.7%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토목공종의 경우, 민간부문의 호조세로 기계설치와 발전 및 송전 수주 등은 양호했으나, 도로 및 교량과 철도 및 궤도 수주 등은 부진했음.
 - 토지조성과 기계설치, 그리고 발전 및 송전 수주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5%, 8.7%, 23.7%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 반면,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하였으며, 철도 및 궤도 수주도 57.3% 감소해 부진하였음.

<표 2> 상반기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토지조성	상하수도	기계설치	발전 및 송전
2017. 1~6월	30,207.5	9,229.8	5,868.5	3,688.9	696.8	4,900.3	982.6	1,475.9	748.6	3,215.2	4,624.2
2018. 1~6월	25,677.9	8,639.7	7,353.5	2,396.9	820.1	3,617.5	419.7	1,808.3	553.3	3,496.2	5,722.2
증감률	-15.0	-6.4	25.3	-35.0	17.7	-26.2	-57.3	22.5	-26.1	8.7	23.7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 · igata@cerik.re.kr)

한·미·일 전문건설 업종의 분류 체계 및 시사점

- 일본에서는 27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60여개로 전문건설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 -

■ 전문건설 업종의 통·폐합은 일괄 하도급이나 다단계 하도급을 조장할 우려 존재

- 최근 건설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25개 전문건설 업종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바, 이는 기술력이 미흡한 업체의 수주나 다단계 하도급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장공사업을 실내건축공사업이나 습식공사업 등과 묶을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도장공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술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입찰 참가가 가능해짐.
 - 이 경우, 기술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장(塗裝) 공사나 방수공사를 낙찰한 회사는 일괄하도급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
- 외국의 건설업 면허 부여 시 업종 구분 사례를 보면, 전문건설업종은 각각의 개별 기능이나 기술에 따라 대부분 30~60여 개의 공종으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2개의 일식(一式)공사와 27개의 전문분야 공사로 분류하고, 공사 종류에 따라 각각의 건설업종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의 건설업 면허는 일반적으로 Class A(General Engineering), Class B(General Building), Class C(Specialty Trade)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면허등급 C는 전문기술 분야의 시공 자격으로서, 특정 전문기술에 따라 63가지 면허로 구분됨.
- 우리나라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업종을 통합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해체공사업(Building Demolition), 지붕공사업(Roofing), 건축물조립공사업, 창호공사업, 단열공사업 등을 독립된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 엘리베이터 등 기계·기구설치나 공기조화설비(HVAC), 위생설비(Sanitation Systems) 등도 독립된 업종으로 구분하는 사례가 많음.

■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과 건설업 면허 체계를 명확히 구분 필요

- 최근 건설업 면허의 통합이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발주패키지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으나, 발주 방식과 건설업 면허 체계는 명확히 구분 필요
 - 일례로 ‘습식공사업(濕式工事業)’ 면허가 있는데, 이는 미장공사와 방수, 조적공사업 면허가 합쳐

- 진 것으로서,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공사를 습식공사로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존재
- 그러나 이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미장이나 조적, 방수공사로 나누어 각각 면허나 시공실적, 관련 기술자를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습식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만드는 것은 발주 방식과 면허 체계를 혼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임.
 - 선진국에서 미장공사나 조적, 방수공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면허는 찾아보기 어려움.
 - 또, 건축공사를 예를 들어 골조공사(토공사+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나 외장공사(창호공사+커튼월공사+실링공사 등)로 패키지화하여 발주할 수는 있으나, 선진국에서 이를 골조공사업이나 외장공사업과 같이 독립된 시공 면허로 업종을 구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일본 및 미국의 건설업면허 분류 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의 건설업 등록제도는 시공자격이나 업역 분쟁을 유발하는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외국의 건설업종 분류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업종으로서, 업무 범위를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및 균열보수 등으로 한정하여 업역 분쟁을 최소화 필요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업 면허와 충돌이 발생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실내 공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종은 내장마감공사업이나 목공사업(Carpentry)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1> 한·미·일 건설업 면허의 업종 분류 체계 비교

한국	일본	미국(캘리포니아 주)	한국	일본	미국(캘리포니아 주)
토건(土建)	-	-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지붕판금	Roofing Sheet Metal
토목	토목일식	General Engineering	승강기설치	-	Drywall Elevator
건축	건축일식	General Building	기계설비	기계기구설치	Boiler, Hot Water Heating Sanitation Systems HVAC
산업·환경설비 조경		Pipeline	난방 가스시설	관(管)공사	Plumbing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조경	Landscaping	상·하수도설비	수도설비	Pipeline
실내건축	내장마감 목공사	Flooring Carpentry	강구조물		Structural steel
포장	포장(鋪裝)		철강재설치	강구조물	
토공사	비계·토공·콘크리트 해체공사	Earthwork and Paving	삭도설치		
보링·그라우팅 비계·구조물해체		Building Demolition Concrete	철도·궤도	준설	-
철근콘크리트	철근	Reinforcing Steel	준설	준설	-
습식공사 (미장·방수·조적)	미장 방수	Lathing & Plastering	시설물유지관리	-	-
	타일·벽돌·블록	Masonry Tile	수중공사	-	-
도장	도장	Painting & Decorating		열절연 전기	Insulation & Acoustical Electrical
석공사	석공사			전기통신	Low Voltage Systems
	창호			소방시설	Fire Protection
금속구조물·창호	유리	Glazing		착정	Water Well Drilling
	-	Ornamental Metals		청소시설	
					기타 20여 종

최민수(선임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8.3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2 전문위원회 3차 회의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 참여
8.8	기획재정부	• 민간투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경영금융연구실 박수진 연구위원 참여
8.10/17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 전문위원회 4차(8.10)/5차(8.17) 회의에 나경연 부연구위원 참석
8.22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제18차 회의에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참여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건설시장과 향후 감소세가 예상되는 국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수주 활동과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상황임. - 해외 사업 수주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프로젝트관리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저가 수주 및 리스크 감수 등의 전사적 차원의 전략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16개 기능 분야의 체계(절차/조직/전산시스템)와 계획/실행/모니터링 및 통제/종료 단계의 프로세스 그룹에 대한 역량 현황을 조사분석함.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량 분석 결과를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역량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함. - 국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프로젝트관리 역량은 57.3점(프로젝트관리 체계 57.8점, 프로세스 그룹 56.3점)으로 선진기업 대비 약 71% 수준으로 파악됨. 장현승 외 2인(2007)이 수행한 연구 결과(선진기업 대비 약 81% 업무 능력 보유)와 비교하면, 국내 기업들의 역량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 사업 프로젝트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돼 있거나 발전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 국내 기업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수준 및 범위의 표준 절차와 전산시스템의 보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 발간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위탁으로 추진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완료 및 연구보고서 발간
-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및 지역 자문단을 통해 지역별 실태와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프로젝트 제시
 -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으로 추정
- 연구 결과를 실제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 및 활동 추진
 - 주요 기관 전달과 홍보를 통해 2019년 SOC 예산 수립에 활용되도록 지원 예정

한여름 폭염 속에 겨울로 가는 건설투자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투자는 한여름 폭염 속에 겨울로 들어가고 있다. 올 1분기만 해도 1.8% 증가를 기록했던 건설투자는 2분기에 0.7% 줄었다. 2015년 1분기 이래 12분기(3년) 연속 늘었다가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로 전환한 것이다. 건설투자가 줄어든 것과 함께 그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도 문제다. 2017년 3분기까지만 해도 건설투자 증가율은 8%를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4분기에 3.8%, 올해 1분기에 1.8%를 기록했다가 2분기에는 아예 -0.7%를 기록했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7월 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7%, 국내 기계 수주는 1.4%, 건설 기성은 4.2%, 건설 수주는 무려 16.9%나 떨어졌다. 건설 수주 실적은 이미 작년 하반기에도 14.7%나 줄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1년 간 계속 수주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건설 투자 감소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대개 건설 수주는 1년 내지 1년 반 가량의 시차를 두고 건설 투자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설경기 위축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에 미친 영향은 어떨까? 2017년에 51.2%를 기록했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올해 1분기에는 7.1%로 급락하더니, 2분기에는 아예 마이너스 기여율(-3.4%)로 떨어졌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건설업 취업자 수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던 2014년 이후부터 크게 늘어나 2017년에는 35%를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빠르게 하락하면서 5월 기여율은 5.6%로 급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올해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줄고, 건설수주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 실적치를 볼 때 건설경기 하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같은 전망치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건산연 전망대로 1.3% 감소한다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2%p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취업자 수는 약 2만 4,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건설 취업자 수는 약 1만 4,000명 가량 줄어들 것이다.

올해 2분기 건설투자와 수주 실적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건설투자가 빙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빙하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겨울의 초입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고, 2분기부터 침체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만약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건설투자는 더 빨리,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 정책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 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SOC 예산안은 올해(19조원)보다 더 줄어든 16조 9,000억원이라고 한다. 내년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정부는 적절한 규모의 SOC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인프라 투자 갭’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인프라 투자 갭을 메꾸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버티고 있다지만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반기 경제나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경고등이 켜졌다. 크고 작은 수많은 악재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퍼펙트 스톱’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건설투자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다.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건설경제, 2018.8.6>

이상호(원장·shlee@cerik.re.kr)



국제 컨퍼런스 국가 인프라 투자 전략 모색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Strate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2018년 9월11일(화) 14시~18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시간	주제	내용	연사
13:00-14:00		접수	
14:00-14:10		환영사	박순자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4:10-14:20		개회사	유주현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4:20-14:30		축사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
14:30-14:40		기념촬영	내외빈
14:40-15:20	1세션	1주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진국 인프라 투자 전략과 동향 버나드 뮐러 (Bernhard Müller) UNECE PPP 분과 공동의장 (전 독일 재무부 차관)
		2주제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 및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 앙 리안액 (Ang LianAik) 싱가포르 건설사업청(BCA) 국장
		토론	좌장 (한민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전 국토해양부 차관) 패널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 박태원 두산건설 부회장)
16:20-16:40		휴식(Coffee Break)	
16:40-17:05	2세션	1주제	글로벌 시장의 스마트시티 동향 마크 라스본 (Mark Rathbone) PwC 파트너
17:05-17:30		2주제	선진국 인프라 투자 동향과 전망 리처드 마셜 (Richard Marshall) FitchSolutions 인프라 부문장
17:30-18:00		토론	좌장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패널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참가 접수 안내

- 참가비 : 무료
- 사전접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서 사전 참가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주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 FCA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The Federation of Construction Associations

후원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리서치 데인건축학회